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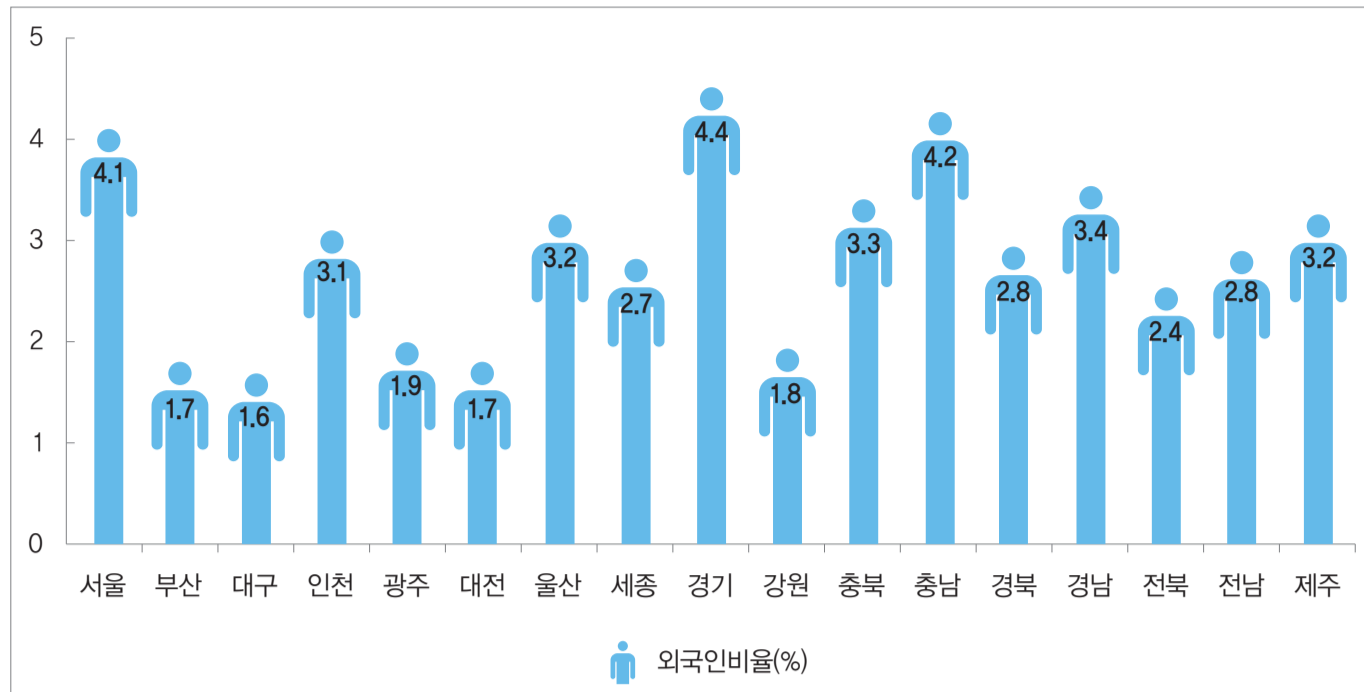
이주민 사회통합은 지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이주민 통합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그 수 역시 크게 증가

○ 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총 국내 체류외국인은 총 1,711,013명(전체 인구 대비 3.4%, 2015년 기준)

-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특광역시인 경우는 서울(4.1%), 울산(3.2%), 인천(3.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도의 경우는 경기(4.4%), 충남(4.2%), 경남(3.4%), 충북(3.3%) 등의 순으로 높음



출처: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주민을 지역사회로 통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외국인 이주민 통합 관련 정책은 지금까지 주로 여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였으나 이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공간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주민을 지역사회로 통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이주민 통합의 개념 및 유형

○ 이주민 통합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통합은 국가발전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

- 통합은 규범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안정성 또는 안전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
- 일반적으로 통합은 하나의 체계적인 전체 내에서 부분들의 연결을 의미하거나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으로 이해되는 하나의 전체에 속하는 요소들 간 관계의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

○ 이주민 통합은 새로운 인구그룹을 이주수용사회의 기존 사회구조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

- 이러한 인구그룹들을 어떻게 경제적, 사회적, 법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기존 시스템과 관계를 맺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으로 정의

○ 통합은 일반적으로 구조적 통합, 문화적 통합, 사회적 통합 및 정체성 통합으로 구분

구분	주요내용
구조적 통합	이주를 수용한 사회의 핵심분야(노동시장, 교육체계, 주택시장, 정치적 공동체 등)에서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둠
문화적 통합	이주민이 사회의 구성원과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화과정을 통해 구성원자격을 획득하는 것에 중점을 둠
사회적 통합	이주를 수용하는 사회에서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연결망, 타인종간 결혼 및 각종 사회단체의 구성원 등으로 활동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정체성 통합	이주민의 주관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으로써 이주민들이 이주수용사회, 지역사회 등에 대해 개인적인 소속감이나 정체성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

※ 학자들에 따라서는 통합을 4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여러 개의 요소가 혼합된 것으로 인식하며, 경제적 통합, 법적 통합, 정치적 통합, 종교적 통합, 공간적 통합 등과 같은 유형으로도 구분

이주민 통합 관련 문제점

○ 전담부처의 부재와 사업 시행 주체들 간의 협력 부족

- 이주민 통합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담부처가 필요하나 중앙부처 중 어느 부처가 통합 관련 정책의 책임부서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
-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서로 다른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는 지역기관들이 있으나, 이들이 타 기관과 업무를 연계-협력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정책 사각지대 발생

-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이주민정책을 추진하여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은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이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와 외국 국적 동포,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귀화자와 그 자녀,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유학생, 보건복지부는 여성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과 사각지대 문제가 동시에 발생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차별성 부족

- 외국인 이주민정책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으며, 자치단체의 정책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정책과 거의 동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한 기본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의 특성,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사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못한 한계 존재

○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제 부족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계획 미수립
- 또한 이주민 통합을 담당하는 조직의 설치,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 도입 등 통합을 위한 제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

이주민 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

○ 이주민정책은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

- 국가는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다양한 부처의 정책들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이주민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이주민 통계의 통합 관리

- 이주민 통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책조정과 모니터링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이주민 지원사업의 유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한 사업의 통합 운영과 폐지를 유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 이주민 통합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 적용의 대상을 모든 이주 배경을 가진 모든 외국인으로 정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의 보편성을 보장
-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외국인끼리의 결합 등 다양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이들을 위한 정책 발굴-추진

○ 부처간 서비스 협업체계 구축

- 협업을 통하여 부처별로 운영되는 지원센터 간의 연계성 및 협업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민이 서비스를 신청 하기 위해 많은 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야 함
- 서비스협업체계는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유형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자치체)가 위치한 건물에 관련 기관 이전 또는 가능 입주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가 위치한 건물에 관련 기관 이전 또는 가능 입주
지자체 외국계주민 지원센터 활용형	지자체 외국계주민 지원센터가 위치한 건물에 관련 기관 이전 또는 가능 입주
외국인력지원센터(거점) 활용형	거점(8곳)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민원행정 관련 기관 및 가능 입주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을 종합하여 중-장기적인 통합계획 수립 필요
- 기초자치단체는 이주민의 복지와 한국어 교육 등을 담당하며, 이주민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운영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통합 관련 제도 도입 및 기반 구축

- 지역현실을 반영한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주민 통합담당 조직의 설치 및 조정기능 강화 필요
- 이주민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본문보기: 박해욱·윤영근(2016),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통합정책 연구 - 한국과 독일의 사례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용문의: 박해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hypark@krila.re.kr, 033-769-9852)

지난호 보기: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 세출효율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내(윤태석 수석연구원) [원문보기](#)

✉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